

기독교 인도주의와 한국형 ODA (K-ODA)의 정체성 형성 연구: ‘변혁적 개발’의 가치가 ‘수혜의 기억’을 거쳐 제도화되는 경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dentity Formation of South Korean ODA (K-ODA) Based on Christian Humanitarianism: The Path from ‘Transform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Memory of Receipt’ to Institutionalization

이태혁 (Taeheok Le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trace the formation of the normative identity of South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DA) by integrating global discourse on Faith-Based Organizations (FBOs) with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Korea’s transition from an aid recipient to a donor country. To this end, the research employs Bryant L. Myers’ ‘Transformational Development’ as its core value, and utilizes Maurice Halbwachs’ ‘Collective Memory,’ Paul Pierson’s ‘Path Dependency,’ and Gerard Clarke’s ‘Institutionalization’ as its analytical framework.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Holistic Ministry’ practiced by early FBOs in the 1950s provided the experiential basis on which a ‘Memory of Receipt’ was formed within Korean society. During the donor transition period, this collective memory recurred in the language of policy documents, shaping a particular path dependency for South Korean ODA. This path is also visible in the 4th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6-2030), which adds AI and culture as new priority sectors while retaining health and education among its traditional areas of strength. This indicates a pattern in which the means are renewed while the underlying purpose is retained. Taken together, these documents form what this study calls a ‘Discursive Identity System,’ in which policy texts from different periods share a common vocabulary and mode of justification. Ultimately, this study

* 2026년 5월 9일 접수, 9월 10일 최종수정, 9월 10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A8005820).

** 부산외국어대학교(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만오교양대 강의교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D680, gwheok@bufs.ac.kr

interprets the South Korean case as a process in which religious values, functioning as what Clarke terms 'Agents of Transformation', have been translated into the language of public policy.

Key words: South Korean ODA (K-ODA), Christian humanitarianism, transformational development, memory of receipt, path dependency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 제기: '수혜의 기억'과 규범적 층위의 형성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역사적 경로를 가진 대표적 사례(representative case)이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최빈국이었던 한국 사회는 월드비전(World Vision), 컴패션(Compassion) 등 기독교 인도주의 기반의 신앙기반기구(Faith-Based Organization, 이하 FBO)를 통해 보건, 교육, 아동 복지 등을 포괄하는 전인적 사역(Holistic Ministry)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물질 지원을 넘어,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기억으로 축적되었다. 이른바 '수혜의 기억(Memory of Receipt)'은 공여국 전환 이후 '사랑의 빛'이라는 규범적 서사로 재구성되었으며, 이는 정책 목표의 설정과 정당화 과정에서 작동하는 '규범적 층위(Normative Layer)'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가 다루는 '기독교 인도주의(Christian Humanitarianism)'는 특정 교단이나 선교 신학의 입장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 이웃 사랑과 청지기 정신에 근거하여 인간의 고통에 응답하고 전인적 회복을 추구하는 실천적 가치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물질적 시혜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인간 존엄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세속적 인도주의(secular humanitarianism)와 구별되는 규범적 특수성을 지닌다. 본 연구가 사용하는 세 개념 또한 이러한 정의 위에서 위계를 이룬다. 즉 기독교 인도주의라는 가치가 초기 FBO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한국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체험된 것이 '수혜의 기억'이며, 이 기억이 사회적 서사화 과정을 거쳐 '사랑의 빛'이라는 도덕적 언어로 응축되고, 이것이 다시 정책 목표의 설정과 정당화에 동원되는 담론적 자원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규범적 층위'가 형성된다. 세 개념은 이처럼 '경험(수혜의 기억) → 서사화(사랑의 빛) → 정책적 동원(규범적 층위)'이라는 위계적·순차적 관계에 있으며, 이 위계는 2장의 분석 모델과 직접 연동된다. 다만 이 위계는 본 연구가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이 아니라, 이하의 서술을 조직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설정한 전제이다. 세 개념의 순서는 논증의 출발점이지 결과가 아니며, 각 단계가 실제로 관찰되는지는 3~5장의 자료 검토를 통해 단계별로 확인된다. 즉,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여력의 산물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가치가 결합된 정체성의

산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한국 ODA의 발전을 주로 경제적 성과, 제도적 효율성, 혹은 외교적 실용주의 관점에서 분석해 왔으며, 기독교 인도주의라는 규범적 뿌리가 국가 정책으로 전이되고 제도화되는 역동적 과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특히 초기 FBO의 가치가 어떻게 사회적 기억으로 축적되고, 나아가 정책 담론과 제도적 구조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통합적 분석 메커니즘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형 ODA(K-ODA)의 규범적 정체성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그것이 최신 정책 담론인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규범적 층위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네 이론을 순차적으로 결합한다. 브라이언트 마이어스(Bryant L. Myers)의 ‘변혁적 개발’은 FBO 실천의 가치적 기반을 설명하고,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집단 기억’은 그 경험의 사회적 서사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어 폴 피어슨(Paul Pierson)의 ‘경로의존성’은 그 서사가 정책적 관성으로 고착되는 과정을, 제라드 클라크(Gerard Clarke)의 ‘제도적 안착’은 그 경로가 공식 기구와 법령으로 명문화되는 과정을 다룬다. 네 이론이 어떻게 하나의 연쇄 모델로 결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증은 2장에서 제시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K-ODA가 지닌 기독교 인도주의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다. 특히 과거의 유산이 현대의 혁신 기술 및 문화와 결합하여 어떠한 ‘담론적 정체성 체계(Discursive Identity System)’로 재구성되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공식 정책 문서를 대상으로 이론 주도의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며, 단순 키워드 빈도 측정을 넘어 해당 용어가 사용된 맥락(Context)과 정책 목표와의 연결 관계를 중심으로 담론을 해석한다. 다만 여기서의 분석은 계량적 인과 추론이나 표본에 근거한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가치-기억-경로-제도’ 모델은 검증이 완료된 설명 모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기의 자료를 하나의 물음 아래 배치하기 위한 분석 틀(analytical framework)이며, 그 유용성은 각 단계가 해당 시기의 자료에서 실제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3~5장에서 사후적으로 평가된다.

논문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가치-기억-경로-제도’ 분석 모델을 이론적으로 정립한다. 제3장에서는 1950년대 초기 FBO 활동을 중심으로 ‘수혜의 기억’이 형성되는 역사적 기원을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기본법 제정과 정책 체계 구축을 통해 규범적 가치가 국가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제도적 안착 과정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정부 백서 및 정책 문서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 초기 FBO의 실천에서 확인된 특성이 최신 계획 문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제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II. 분석 모델 및 이론적 정교화

1. 가치의 기원과 사회적 각인: 변혁적 개발과 집단 기억

한국형 ODA의 정체성은 단순한 국가 간 자원 배분의 차원을 넘어선 규범적 기원을 갖는다. 본 연구는 그 가치적 원형을 Myers(2011)가 제안한 '변혁적 개발(Transformational Development)'에서 찾는다. Myers는 빈곤을 단순한 물질적 결핍이 아닌 '관계의 왜곡(broken relationships)'으로 규정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삶의 전인적 회복을 지향한다(Myers, 2011: 110-130). 1950년대 한국전쟁 전후 초기 FBO들이 실천한 보건, 교육, 아동 복지 중심의 통합 구호는 이러한 변혁적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한 사례였다.¹⁾

이러한 개별적·현장적 경험이 국가적 정체성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Halbwachs(1992)의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 이론으로 설명된다. Halbwachs에 따르면 기억은 개인의 파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틀(social frameworks) 속에서 재구성되어 공유된다(Halbwachs, 1992: 38-40). 한국 사회가 공유하는 '수혜의 기억(Memory of Receipt)'은 공여국 전환기를 거치며 갇아야 할 것으로 이해되는 도덕적 서사로 재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사랑의 빚'으로 개념화한다. 한국이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라는 사실이 한국 ODA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온 것(임형백, 2014)은 이러한 재구성의 한 단면이다.

2. 정책적 전이와 제도적 안착: 경로 의존성과 변혁의 대리인

형성된 가치와 기억이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메커니즘은 Pierson(2000)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모델을 통해 정교화된다. Pierson은 초기 제도적 선택과 규범적 정향이 자기강화적 과정(Self-reinforcing Process)을 거쳐 정책적 관성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Pierson, 2000: 251-267). 본 연구는 이를 세 단계로 구체화하되, 각 단계를 그 단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관찰 지표와 함께 정의한다. 첫째, '초기 규범적 경험의 내면화'는 원조 수혜기의 구호 경험이 개인의 생애 경험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회고되면서, 받은 것은 갚아야 한다는 도덕적 평가를 동반

1) 국내 연구에서 holistic mission은 '통전적 선교'(고선숙, 2014 ; 박현준, 2019) 또는 '총체적 선교'(김성민, 2017)로 옮겨진다. 본 연구는 1950년대 FBO의 구호 실천이 보건·교육·아동복지를 결합한 형태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이를 '전인적 사역'(Holistic Ministry)으로 지칭한다. 선교론의 개념인 holistic mission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하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초기 수혜 기관의 기록이 수혜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는가를 통해 관찰된다. 둘째, ‘정책 엘리트의 인지적 필터’는 정책 결정자가 새로운 선택지를 평가할 때 위의 도덕적 평가를 준거로 삼아 특정 분야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인식상의 선별 기제를 뜻한다. 이는 설립 근거법의 목적 조항이 경제협력에 한정되지 않는 목적을 규정하는지, 그것이 특정 분야(보건·교육·아동)의 우선순위와 연결되는지 여부를 통해 관찰된다. 셋째, ‘공적 담론으로의 확산’은 이 준거가 특정 개인의 신념에 머물지 않고 정부의 공식 간행물과 대외 연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어휘로 정착한 상태를 뜻한다. 이는 『대한민국 ODA 백서』에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라는 서사가 단순한 사실 기술이 아니라 정책 정당화 문장의 근거절로 등장하는지를 통해 관찰된다. 세 단계의 경험적 확인은 각각 3장 2절, 4장 1~2절, 5장 2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형성된 경로는 Clarke(2007)가 제시한 ‘제도적 안착(Institutionalization)’ 단계를 거치며 정책 시스템 내에 고착된다. Clarke는 종교적 가치를 지닌 주체들이 ‘변혁의 대리인(Agents of Transformation)’으로서 세속적 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Clarke, 2007: 77-96). 한국의 경우, 초기 기독교 NGO의 전인적 사역 모델이 KOICA 설립 및 민관협력 제도화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4장에서 검토한다.

3. 분석 모델: 한국형 ODA 정체성 형성의 연쇄 메커니즘

본 연구는 위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형 ODA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가치(Myers)-기억(Halbwachs)-경로(Pierson)-제도(Clarke)’ 연쇄 모델을 분석 틀로 제안한다. 이는 정책의 형성과 정당화 과정에서 작동하는 가치, 도덕성, 정체성 담론의 집합인 ‘규범적 층위(Normative Layer)’가 실제 정책 구조로 발현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통합적 모델이다. 네 기제를 하나의 모델로 묶는 근거는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뒤 단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되며, 앞 단계가 없으면 뒤 단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순서상의 제약에 있다.

첫째, Myers가 말하는 변혁적 가치는 FBO의 구체적 실천(1:1 아동결연 등)으로 구현되어야 비로소 관찰 가능한 사회적 사실이 된다. 둘째, 이 사실이 Halbwachs가 말하는 사회적 틀 속에서 반복적으로 회고·재현됨으로써 ‘수혜의 기억’이라는 집단기억으로 응축된다. 셋째, 이 집단기억은 Pierson이 말하는 초기 제도적 선택—공여국 전환기의 정책 언어 채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인지적 자원으로 작동하며, 자기강화적 과정을 거쳐 경로를 고착시킨다. 넷째, Clarke가 논의하는 제도적 안착은 이렇게 고착된 경로가 법령의 목적 규정과 지원 근거로 명문화되는 단계에 해당한다. 이처럼 네 기제는 각각 독립적인 이론적 자원이 아니라 전(前) 단계의 결과를 후(後) 단계의 성립 조건으

로 삼는 연쇄를 이룬다는 점에서 비로소 하나의 분석 모델을 구성한다. 다만 이는 앞 단계가 뒤 단계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결정론적 주장이 아니라, 뒤 단계를 설명하려면 앞 단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상의 순서 규칙에 해당한다.

[표 1] 한국형 ODA 정체성 형성의 단계별 메커니즘과 분석 지표

단계	핵심 기제(이론)	조작적 정의(무엇을 가리키는가)	관찰 지표(무엇을 보면 확인되는가)	분석 자료
Step 1 기원 (Origin)	변혁적 가치 (Myers, 2011)	빈곤을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관계의 왜곡으로 규정하고, 구호·교육·자립 지원을 결합해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실천 원리	단일 목적의 시혜형 급부가 아니라 보건·교육·아동복지가 결합된 복합 사업 구성인가, 1:1 결연과 같이 관계를 매개로 한 전달 방식이 채택되었는가	초기 FBO의 사업 기록 및 선행연구(김성민, 2017 ; 광병구, 2021)
Step 2 각인 (Inscription)	집단 기억 (Halbwachs, 1992)	개별적 수혜 경험이 사회적 틀 안에서 반복 재현되면서 공유된 서사로 응축된 상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라는 서사가 한국 ODA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가	선행연구(임형백, 2014)
Step 3 전이 (Transition)	경로 의존성 (Pierson, 2000)	초기 제도 선택이 수확 체증·고착·높은 전환비용을 통해 유지·재생산되는 과정	① 설립 근거법의 목적 조항이 경제협력에 한정되지 않는 목적을 규정하는가, ② 초기 우선 분야(보건·교육)가 이후 사업 포트폴리오에서도 상위 비중을 유지하는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목적), 『대한민국 ODA 백서』 분야별 지원 실적, 『제4차 종합기본계획』
Step 4 안착 (Anchoring)	제도적 안착 (Clarke, 2007)	규범이 법령의 목적 규정과 지원 근거로 명문화되어 특정 행위자와 무관하게 재생산되는 단계	① 법령의 기본정신·목표 조항에 인도주의·인권 등 비경제적 목적이 명시되는가, ②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그 기본정신·목표와 연동된 형태로 규정되는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제17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출처: 기존 문헌 활용 저자 작성함.

이 표는 네 기제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각 기제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자료의 어떤 속성을 보아야 하는지를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 모델의 적용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즉 ① 해당 시기의 자료를 수집하고, ② 표에 제시된 관찰 지표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며, ③ 앞 단계의 지표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뒤 단계의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 절차는 모델을 반증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이 순서에 따라 한국형 ODA의 역사적 기원부터 최신 정책 담론까지를 고찰한다.

III. 수혜의 기억의 역사적 형성과 사회적 내면화

1. 전쟁과 구호: 전인적 사역의 역사적 기원 (1950s-1970s)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해체를 경험하였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극도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오늘날 최빈국 수준과 비교될 만큼 열악한 상태였다.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기제였으며, 이 시기 제공된 원조는 단순히 물질 결핍을 채우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보건, 교육, 아동 복지를 포괄하는 복합적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 사례가 월드비전(World Vision)과 컴패션(Compassion)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밥 피어스(Bob Pierce)가 1950년 한국에서 설립한 월드비전은 한국선명회로 불리며 북미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전쟁고아와 아동들에게 의식주와 교육을 제공하는 데서 출발하였다(김성민, 2017: 52). 에버렛 스완슨(Everett Swanson)이 1952년 한국의 전쟁고아를 돕기 위해 시작한 컴패션은 1954년부터 후원자와 어린이를 잇는 1:1 결연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이 결연을 통해 제공된 것은 식량과 의복에 그치지 않고 거주 공간, 의료, 교육을 함께 포괄하였다(곽병구, 2021: 207-208). 이처럼 두 기구의 지원은 단기적 물자 배급을 넘어 아동의 생활 전반과 자립 역량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다음 절에서 논의할 ‘수혜의 기억’ 형성의 경험적 기반이 된다.

이러한 활동은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개발의 핵심 특성인 변혁성(transformative), 총체성(holistic), 통합성(integrated)을 내포하고 있었으며(김성민, 2017: 59), 이는 Myers(2011)가 제시한 ‘변혁적 개발(Transformational Development)’의 이론적 기제와 궤를 같이한다. Myers에 따르면 빈곤의 본질은 물질적 결핍을 넘어 인간이 하나님,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겪는 관계의 왜곡에 기인한다. 실제로 컴패션은 고아원 설립과 후원 못지않게 직업훈련을 중요한 사업으로 삼아 김포 농장학교와 영진 직업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이는 아동이 보살핌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기관의 가치에 따른 것이었다(곽병구, 2021: 212). ‘1:1 아동 결연’과 직업훈련의 결합은 이러한 관계 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는 변혁적 개발의 실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구호 활동을 넘어, 다음 절에서 논의할 ‘수혜의 기억’이 형성되는 구체적 기반이 되었다.

2. 수혜의 기억과 집단 기억의 형성 (1970s-1990s)

전인적 사역의 경험은 개개인의 기억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공유되는 집단적 기억으로 확장되었다. Halbwachs(1992)의 이론적 틀에 따르면, 기억은 개별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틀

(Social Framework) 안에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한국의 경우, 전후 경험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단순한 '원조의 기록'을 넘어 깊어야 할 것으로 이해되는 도덕적 서사로 재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사랑의 빚(Debt of Compassion)'으로 지칭한다.

특히 이러한 기억은 과거의 고통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행동 지침을 규정하는 '규범적 기억(Normative Memory)'으로 기능한다. 이는 제2장에서 정의한 '규범적 층위(Normative Layer)'가 역사적 기억을 통해 형성되는 경로를 보여준다. 다만 이 서사가 사회 전반에서 어떤 경로로 재생산되었는지는 별도의 자료를 요하는 문제이며, 본 연구는 그것이 정책 언어에 나타나는 양상에 한정하여 다음 절에서 검토한다.

3. 사회적 기억의 내면화와 제도화 (1980s-2000s)

사회적으로 형성된 수혜의 기억은 1990년대 본격적인 공여국 전환기(Transition Period)를 거치며 국가적 정책 인식 구조로 내면화되었다. 원조 수혜를 경험하며 성장한 세대가 정책 결정 과정의 핵심 엘리트로 등장하면서, 그들의 인식 구조에 자리 잡은 기억은 공적 담론과 정책 설계의 인지적 필터(Cognitive Filter)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Pierson(2000)이 설명한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메커니즘으로, 초기 규범적 경험이 이후의 정책 경로를 제약하고 강화하는 자기강화적 속성을 발휘한 결과이다.

한국이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라는 사실은 한국 ODA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며(임형백, 2014), 정부의 『대한민국 ODA 백서』(2017) 역시 그 발전 과정을 ODA 추진의 배경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인지적 필터가 정책 언어로 투영된 사례이다. 이러한 과정은 종교적 가치가 공적 영역에서 제도적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한 Clarke(2007)의 논의와도 부합한다. 다만 이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수혜 경험이 정책 언어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에 한정된다. 그것이 실제 제도 설계와 사업 구성으로 이어졌는지, 그리하여 한국의 개발협력을 '규범적 개발 모델(normative development model)'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자료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며, 이는 다음 장에서 법령의 목적 규정과 분야별 지원 실적을 통해 확인한다.

IV. 공여국 전환과 한국형 ODA의 제도화

1. 공여국으로의 전환과 정책 패러다임의 형성 (1980s-2000s)

1980년대 후반 이후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설립과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출범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공여국(Donor)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립을 넘어, 한국이 수혜국의 정체성을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적 역할을 자각하기 시작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전환의 이면에는 제3장에서 분석한 ‘수혜의 기억’과 ‘사랑의 빛’이라는 도덕적 서사가 정당화의 언어로 활용되었다. 예컨대 『대한민국 ODA 백서』(2017)는 한국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ODA 추진의 배경으로 서술하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의 기술을 넘어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규범적 층위(Normative Layer)의 자원이 제도화 과정에 투여되었음을 보여준다.

2. 경로 의존성과 정책 설계: ‘정체성 기반 개발 체계’의 형성

Pierson(2000)은 경로 의존성이 성립하는 조건으로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초기 선택의 고착(lock-in), 그리고 경로 전환에 소요되는 높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제시한다 (Pierson, 2000: 251-255). 한국의 사례는 이 세 조건에 각각 대응한다. 첫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는 협력단의 설립 목적으로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의 실현을 규정한다. 인도주의와 삶의 질을 목적 조항에 병기한 이 규정 아래에서, 이후의 사업 기획은 교육·보건 등 초기 FBO의 활동 영역과 겹치는 분야에 반복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둘째, 1987년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1991년 KOICA라는 초기 제도는 이후 관련 법령·조직 구조가 준거하는 기준점으로 고착되었다. 셋째, 이렇게 구축된 조직·예산·인력 체계는 상당한 매몰비용을 수반하므로, 정책 엘리트들에게는 경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보다 기존 경로 위에서 점증적으로 확장할 유인이 주어졌다.

이러한 경로 의존성은 법령과 사업 양쪽에서 확인된다. 먼저 법령 층위에서,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함께 인권 향상, 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의 실현을 명시하고, 경제협력관계의 증진을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로 병치한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가 설정한 목적 규정의 성격이 이후의 최상위 법령에서도 유지된 것이며, 이 점에서 목적 규정 자체가 경제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사업 층위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KOICA 사업에서 교육 및 보건 분야가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온 점은 역대 『대한민국 ODA 백서』의 분야별 지원 실적에서 확인된다. 본 연구는 이를 초기 FBO의 활동 영역이 제도 설계 단계에서 사업 우선순위로 반영된 뒤 예산·조직 관성을 통해 유지·재생산된 결과로 해석한다. 이 경로는 최신 계획에서도 이어진다. 「제4차 종합기본계획」은 보건, 농촌개발, 교육, 기후, 공공행정을 전통적 강점분야로 규정하면서 AI와 문화를 새로운 중점 분야로 추가하는데, 초기의 우선 분야가 유지된 채 새로운 분야가 더해지는 구성은 앞서 말한 점증적 확장의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3장에서 유보하였던 ‘규범적 개발 모델(normative development model)’이라는 규정은 가치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법령의 목적 규정과 사업 포트폴리오의 분야 구성이라는 두 층위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을 요약한 개념이다. 이 점에서 한국형 ODA는 역사적 기억과 규범적 가치가 제도적으로 응축된 ‘정체성 기반 개발 체계(Identity-based Development System)’로 이해될 수 있다.

3. 제도적 안착과 거버넌스 구조: 변혁의 대리인으로서의 NGO

한국형 ODA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는 정부와 민간이 결합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구축되었다. 이는 종교적 행위자가 공적 영역에서 제도적 주체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한 Clarke(2007)의 ‘변혁의 대리인(Agents of Transformation)’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는 국가 등이 이 법의 기본정신 및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이 지원의 요건을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와 연결해 두었다는 점은, 민관협력이 단순한 사업 위탁이 아니라 법이 정한 규범적 목적을 공유하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조항은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 부문의 제도적 위상이 어느 정도로 안정적인지는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 이러한 혼합적 거버넌스 구조는 민간이 축적해 온 실천 경험이 공적 정책의 틀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었다. 실제로 개발 NGO들의 협의기구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에 가입된 단체 가운데 개신교 단체가 31.5%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는, 한국 ODA의 민간 실행 주체에서 기독교 기반 단체가 적지 않은 비중을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한국국제협력단, 2015; 박현준, 2019, 273에서 재인용).

4. 제도화 과정의 정리와 논의의 한계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형 ODA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변혁적 가치(Myers)는 집단 기억(Halbwachs)을 통해 사회적으로 각인되었고, 경로 의존성(Pierson)을 통해 정책 설계에 반영되었으며, 제도적 안착(Clarke)의 단계에서 법령과 조직으로 명문화되었다. 다만 이 장에서 확인한 것은 제도의 형식적 구조에 한정된다. 이러한 구조가 실제 정책 담론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정당화되는지는 다음 장에서 검토한다.

V. 담론 분석: 한국형 ODA 정체성의 문헌적 고찰

1. 분석 설계: 담론 분석의 틀과 방법

본 장은 제2장에서 제시한 ‘규범적 층위(Normative Layer)’가 실제 정책 담론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담론 분석(discourse analysis)을 수행한다. 국가 정체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공식 문서와 정책 언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정책 담론 분석은 정체성 연구의 핵심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질적 내용 분석에 기반한 이론 주도 담론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1991년 KOICA 설립 이후의 (1)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ODA 백서』(2017),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 (3)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으로 한정하였다. 분석대상 문서의 선정은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① 정부의 공식 백서로서 역사적 서사를 공식화한 문서(『대한민국 ODA 백서』), ②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으로서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공여 기구의 설립 목적을 규정한 문서(「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법」), ③ 최신 종합계획으로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문서(「제4차 종합기본계획」). 코딩 절차는 먼저 제2장에서 도출한 ‘책임(why)-호혜성(relationship)-변혁성(what & how)’의 1차 코드북을 구성한 뒤, 전체 텍스트를 1차 코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코드 배정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코드 범주에 해당하는 대표 텍스트는 [표 3]에 정리하여 제시하고, 그 의미는 2~4절에서 상술한다. [표 3]은 각 코드가 어느 문서의 어떤 규정 또는 어떤 표현에서 확인되는지를 명시함으로써, 이하의 해석이 연구자의 인상적 판단이 아니라 문서상의 언어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분석 절차는 제2장의 이론적 틀에 따라 ‘규범적 책임’, ‘호혜성’, ‘변혁성’의 세 가지 코드 범주를 설정하고 반복적 코딩(iterative coding)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분석은 단순 키워드 출현 여부를 넘

어, 해당 용어가 사용된 문장의 맥락(context)과 정책 목표와의 연결 관계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해석하였다. 아울러 [표2]의 세 코드 범주는 제2장에서 제시한 네 기제 중 서로 다른 단계가 현대적으로 발현된 형태로 대응된다. '규범적 책임' 코드는 Halbwachs가 말하는 집단 기억이 정책 언어로 표출된 것이고, '호혜성' 코드는 Myers가 말하는 관계 회복 가치가 대외전략으로 확장된 것이며, '변혁성' 코드는 Clarke가 말하는 제도화가 최신 정책 문서의 사업 구성에서 다시 확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세 코드의 출현 빈도 자체가 아니라, 각 코드가 어느 이론적 단계의 경험적 지표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함으로써 담론분석 결과와 2장의 분석 모델 간의 대응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표2] 한국형 ODA 담론의 규범적 코드 체계

코드 범주	대표 키워드	분석자료	이론적 해석(mechanism)
규범적 책임 (why)	역사적 책임, 보편적 가치, 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대한민국 ODA 백서』, 대통령 연설	수혜 경험의 의무화→글로벌 공공성 ² (Halbwachs)
호혜성 (Relationship)	파트너십, 동반자, 상생, 글로벌 사우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2011), 한-아세안 정상회의(2019)연설, 「제4차 종합기본계획」	관계 중심적 원조→전략적 상생 ³ (Myers)
변혁성 (what & how)	사람 중심, 혁신, AI·디지털, K-문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KOICA 전략, 「제4차 종합기본계획」(AI·문화)	전인적 사역→제도화된 혁신 모델 ⁴ (Clarke)

출처: 기존 문헌 활용 저자 작성함.

위의 표는 한국형 ODA 담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규범적 축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 활용된 법적·정책적 텍스트의 정합성을 보여준다. [표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규범적 코드는 단순히 추상적인 가치나 선언적 수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는 최상위 법령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규범적 닻(Anchor)으로 삼고, 『대한민국 ODA 백서』와 대통령 연설문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며, 최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미래지향적 국가 전략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분석 자료의 위계는 제2장에서 상정한 '가치-기억-경로-제도' 모델이 국가의 법적 의무와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인 키워드로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근거의 근원성] 한국 ODA의 '출발점'을 다룬다. 법적 원칙과 역사적 기록(백서)은 '왜 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성의 서사를 공식화한 자료이다.

3) [관계의 진화] '누구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다룬다. 외교적 선언(연설)과 최신 상생 전략(4차 계획)은 대등한 파트너십을 입증하는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4) [실행의 구상]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다룬다. 법에 명시된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과 KOICA의 혁신 사업(AI 등)은 실제적인 변화의 도구를 입증한다.

[표3] 코드 범주별 대표 텍스트와 이론적 대응

코드 범주	분석자료	대표 텍스트(요지)	이론적 대응 및 해석
규범적 책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빈곤 감소와 함께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인도주의의 실현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규정	목적 규정이 경제협력에 한정되지 않고 인도주의를 병기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책임 담론이 최상위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안착단계)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목적)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과 함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의 실현을 설립 목적으로 규정	공여 기구의 설립 근거법이 경제 협력에 한정되지 않는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초기 제도 설계 단계에서 규범적 정향이 채택되었음을 보여줌 (전이 단계)
호혜성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 기본계획(2026-2030)」 비전 및 전략목표	비전으로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를, 4대 전략목표의 하나로 ‘호혜적 상생 확대’를 제시	관계 회복의 가치가 국가 간 공동 성장 담론으로 확장된 형태(기원 단계의 관계론적 가치가 대외전략 언어로 재배치)
변혁성	「제4차 종합기본계획」 전략목표 ‘혁신적 개발 이행’ 및 ‘포용적 가치 실현’	AI 등 첨단기술 발전과 민간부문 역할 증대에 따라 ODA 추진방식을 혁신한다고 밝히는 한편, 보건 위기 대응에서 일회성 의약품 지원을 넘어 의료 인프라와 인력의 동반 확충을, 취약계층 지원에서 보호와 함께 생계·자립을, 교육에서 기초교육과 디지털 전환을 함께 제시	수단은 기술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아동·보건·교육이라는 영역과 자립을 겨냥하는 목적은 유지됨 (안착 단계의 재제도화)

출처: 기존 문헌 활용 저자 작성함.

주: [표3]은 현행 정책 문서에서 확인되는 대표 텍스트를 정리한 것이므로, 집단 기억이 형성되는 각인 단계는 3장에서 별도로 다룬다.

이어지는 5.2절부터는 각 코드 범주별로 해당 문헌의 텍스트를 검토함으로써, 수혜의 기억이 현대 정책 담론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규범적 책임 담론: ‘보은’에서 ‘글로벌 공공성’으로의 확장

첫 번째 축인 ‘규범적 책임’ 담론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층위의 책임 근거가 확인된다. 하나는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근거이다. 한국이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라는 사실은 한국 ODA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다(임형백, 2014). 다른 하나는 법령이 규정한 보편적 근거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는 빈곤 감소와 함께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의 실현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한다. 「한

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역시 협력단의 설립 목적으로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의 실현을 규정하고 있다. 경험에 기반한 근거가 한국의 특수한 조건에서 도출되는 반면, 법령이 규정한 근거는 그러한 경험을 전제하지 않는다. 두 근거는 이 점에서 서로 다른 층위에 속한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은 이 가운데 후자를 전면에 배치한다. 계획은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를 비전으로 제시하는데, 여기서 ‘보편적 가치’는 수혜 경험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기대지 않는 근거이다. 즉 책임의 언어가 한국의 과거를 준거로 삼는 데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규범을 준거로 삼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은 집단 기억이 과거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Halbwachs(1992)의 논의와 통한다. 다만 이는 수혜의 기억이 소멸했음을 뜻하지 않는다. 두 근거는 여전히 같은 문서군 안에 공존하며, 최신 계획에서 보편적 가치가 앞자리에 놓였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3. 호혜성 담론: ‘상생’의 두 층위

두 번째 축인 ‘호혜성’ 담론은 최근 ‘호혜적 상생 확대’라는 전략목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 및 공급망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원조를 단순한 자원 이전이 아닌 ‘상호 이익의 창출 메커니즘’으로 재정의하는 담론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의는 Myers(2011: 110-130)의 관계 회복 개념이 국가 간 관계로 유비적으로 옮겨진 형태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논의의 층위는 같지 않다. Myers의 관계 회복이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적 삶을 준거로 삼는 데 비해, 제4차 계획의 상생은 공급망과 경제 안보라는 국익의 언어로 표현된다. 이 점에서 호혜성 담론은 규범적 근거와 전략적 이해가 함께 놓여 있는 영역이며, 어느 쪽이 우세한지는 담론 분석만으로 판정하기 어렵다.

4. 변혁성 담론: 수단의 갱신과 목적의 유지

세 번째 축인 ‘변혁성’ 담론은 「제4차 종합기본계획」의 사업 구성에서 확인된다. 계획은 4대 전략목표의 하나로 ‘혁신적 개발 이행’을 제시하며, AI 등 첨단기술 발전과 민간부문 역할 증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ODA 추진 방식을 혁신하고 AI 기술의 ODA 적용과 문화 등 새로운 중점분야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기술적 갱신이 사업의 목적까지 바꾸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포용적 가치 실

현' 전략목표 아래의 세 과제가 이를 보여준다. 보건 위기 대응에서 계획은 일회성 의약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동반 확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명시한다. 취약계층 지원에서는 기초 위생과 건강 검진, 영양 강화 등 보호에 더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소득 창출 기회 마련 등 생계·자립을 함께 중점 지원한다고 밝힌다. 교육 접근성 강화에서는 취학 전과 학교 밖 아동을 포함한 기초교육을 지원하면서 이러닝 시스템 등 교육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

본 연구는 이 구성이 3장에서 살펴본 초기 FBO의 실천과 구조적으로 겹친다고 본다. 다루는 영역이 아동·보건·교육이라는 점, 단기적 급부에 머물지 않고 자립 역량을 함께 겨냥한다는 점,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당대에 가용한 수단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1950년대에 그 수단이 고아원과 직업학교였다면 오늘날에는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Clarke(2007)가 설명한 제도화 과정, 즉 인도주의적 가치가 세속적 정책 언어로 옮겨지는 양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 구성이 문서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과, 실제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후자는 사업 성과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요하며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VI. 결론: 규범적 가치의 제도화 경로

이상의 담론 분석이 보여주듯, 한국형 ODA는 역사적 기억에서 규범적 담론으로, 다시 정책 언어와 제도 구조로 이어지는 의미의 연쇄를 형성하고 있다. 「제4차 종합기본계획」의 '보편적 가치', '호혜적 상생', '혁신적 개발 이행'이라는 표현은 2장에서 제시한 가치-기억-경로-제도 모델이 현재의 정책 문서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경제적 성장의 산물만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규범적 가치가 결합된 정체성 체계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1950년대 FBO들의 구호 실천은 단기적 급부에 머물지 않고 아동의 생활 전반과 자립 역량을 함께 다루는 형태였으며, 이는 '수혜의 기억'이 형성되는 경험적 기반이 되었다. 둘째, 이 기억은 공여국 전환기에 정책 언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였고,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의 목적 규정, 그리고 보건·교육 중심의 사업 구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형성하였다. 셋째, 이 경로는 최신 계획에서도 전통적 강점분야가 유지된 채 새로운 분야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요컨대 K-ODA의 정체성은 수혜의 기억에 뿌리를 둔 규범적 가치가 법령과 사업 구

성을 통해 제도화된 '담론적 정체성 체계(Discursive Identity System)'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담론적 정체성 체계란 서로 다른 시기의 정책 문서가 공통의 어휘와 정당화 방식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의미 체계를 이루는 상태를 가리킨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개발협력학 분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도주의적 가치-집단 기억-정책 제도화'의 연결을 하나의 분석 틀로 정리하였다. 이는 개발협력을 도구적 정책이 아니라 규범적 정체성의 제도화 과정으로 읽는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보완한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최신 계획이 AI와 문화를 새로운 중점분야로 추가하면서도 보건·교육을 전통적 강점분야로 유지하고, 취약계층 지원에서 보호와 자립을 함께 겨냥한다는 점은 수단이 갱신되는 가운데 목적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정책 문서와 담론 분석에 기반한 해석적 접근을 취했다는 점에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텍스트 분석에 집중함에 따라 실제 사업 성과를 검증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다. 둘째, 한국 사례에 집중한 단일 사례 연구로서 일반화에 신중을 요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 튀르키예, UAE 등 신흥 공여국과의 비교를 통해 규범 기반 모델과 전략 기반 모델의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한국형 ODA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론적 지향이 실제 협력국의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을 다루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의 ODA는 과거 원조 수혜의 경험을 역사적 사실로 남겨두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 언어로 재구성해 왔다. 본 연구가 '사랑의 빛'으로 개념화한 이 서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로마 13:8)는 성경의 가르침과 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K-ODA의 형성 과정은 기독교 인도주의라는 규범적 가치가 국가 정책이라는 세속적 틀 안에서 어떻게 제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본 연구가 제시한 해석이 향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논의하는 데 하나의 참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고선숙 (2014). **한국 개신교의 해외선교와 국제개발: 시론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 곽병구 (2021). 컴패션(Compassion)의 태동에 관한 연구: 1952-1965년 에버렛 스완슨(Everett Swanson)의 전쟁고아 구호활동을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50, 189-221.
- 국무조정실 (2017).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 국무조정실 (2026).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혁신과 성과 기반의 K-ODA**. (2월 26일).
- 김성민 (2017). '총체적 선교' 관점에서 본 국내 기독교 NGO의 지역개발사업 평가와 발전방안 제시: 한국 월드비전과 한국기아대책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1), 39-69.
- 박현준 (2019). FBO(Faith-Based Organization)를 통한 종교계의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79(2), 261-291.
- 임형백 (2014).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전개와 과제. **한국정책연구**, 14(1), 73-102.
- Clarke, G. (2007). Agents of transformation? Donors, faith-based organisation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28(1), 77-96.
- Halbwachs, M. (1992). *On Collective Memory*. (Ed.) Trans. by Lewis A. Coser. L. 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25/1941).
- Myers, B. L. (2011). *Walking with the Poor: Principles and Practices of Transformational Development*. Revised and Annotated Edition. Orbis Books.
- Pierson, P. (2000).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 251-267.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6.04.01).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제협력단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6.04.01).
- 외교부. "5년간의 개발협력,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겠습니다." 공동보도자료.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693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item=50 (검색일 2026.04.05).
- 한국컴패션. "컴패션 소개." <https://www.compassion.or.kr> (검색일 2026.04.12).

기독교 인도주의와 한국형 ODA (K-ODA)의 정체성 형성 연구: '변혁적 개발'의 가치가 '수혜의 기억'을 거쳐 제도화되는 경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dentity Formation of South Korean ODA (K-ODA)
Based on Christian Humanitarianism: The Path from 'Transform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Memory of Receipt' to Institutionalization

이태혁 (부산외국어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신앙기반기구(FBO)에 관한 논의와 한국의 원조 수혜-공여 전환의 역사적 궤적을 결합하여, 한국형 국제개발협력(K-ODA)의 규범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브라이언트 마이어스(Bryant L. Myers)의 '변혁적 개발'을 핵심 가치로,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집단 기억', 폴 피어슨(Paul Pierson)의 '경로 의존성', 제라드 클라크(Gerard Clarke)의 '제도적 안착'을 분석 틀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950년대 초기 FBO들의 구호 실천은 단기적 급부에 머물지 않고 아동의 생활 전반과 자립 역량을 함께 다루는 형태였으며, 이는 '수혜의 기억'이 형성되는 경험적 기반이 되었다. 이 기억은 공여국 전환기의 정책 언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였고, 「한국국제협력단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목적 규정, 그리고 보건·교육 중심의 사업 구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경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서도 확인된다. 계획은 AI와 문화를 새로운 중점분야로 추가하면서도 보건·교육을 전통적 강점분야로 유지하는데, 이는 수단이 갱신되는 가운데 목적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처럼 서로 다른 시기의 정책 문서가 공통의 어휘와 정당화 방식을 공유하며 이루는 의미 체계를 '담론적 정체성 체계'(Discursive Identity System)로 개념화한다.

주제어: 한국형 ODA (K-ODA), 기독교 인도주의, 변혁적 개발, 수혜의 기억, 경로 의존성